◇… 2·30대의 정치적 무관심에 관한 소고

정치불신풍조와 무관심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무관심은 어느 한편의 이익이라는 차원을 넘어 정치에 대한 끝없는 불신과 외면으로 민주주의 실천에 위기를 낳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 정치무관심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글을 싣는다. (편집자 註)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므로 정치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선거는 국가권력의 기초를 다지는 원초적 의식이요. 민주주의의 대축제가 아닐 수 없다. 출발을 그르치면 모든 분야가 삐걱대기 마련이다. 이렇게 본다면 선거에서의 투표의무를 헌법에 못박고, 기권하는 유권자를 처벌하는 몇몇 나라의 입법취지도 수긍되는 점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이번 제14대총선에서 2-30대 유권자가 65%에 이른다. 각정당이 젊은층 표의 흡수에 사활을 걸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는 보다 진보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상식에 비추어보면 신선한 정치감각를 가진 유권자가 약 2/3에 이르는 만큼 새로운 세기를 내다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참신한 정치구도를 짤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보면 이들의 기권율은 예상외로 높으며, 지난 지방의회 선거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다. 젊은층의 투표불참으로 엄청난 반사적 이익을 취한 민자당은 기대 이상의 결과에 입이 벌어져 한동안 표정관리를 하느라 애를 먹었을 정도이다. 물론 압승을 허용한 국민이 지방선거 직후부터 집권당의 횡포에 시달림을 받게 되었지만… 이처럼 정치권에 미칠 새 세대의 잠재적 영향력의 크기와 선거결과에 표출된 유효수요 사이에 심한 괴리가 생기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는 몇가지 정치사회학적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점 몇가지를 지적해보기로 한다.

1. 집권층의 반민주적 행태

우선 정권의 비민주성을 들 수 있다. 현집권세력의 부패타락상은 수서사건을 비롯한 각종의 권력형 부정사건을 통해 그 꼬리가 잡혀 국민들도 알만큼은 알고 있지만, 이 세력은 상상을 초월한 추악한 면을 국민에게 드러냄으로써 정치적 구토증을 유발시키고, 오히려 여기서 이득을 챙기는 기묘한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 정권이 조성한 경제구조는 마치 사기도박판을 차려놓고 자릿세 뜯는 구조나 다를 바 없다.

재벌기업이 '이렇게 뜯길 바에야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할 정도이니 말이다. 나라꼴은 대통령이 직접 불우이웃돕기에 나서야 할만큼 처참하다. 동정심 많은 한 기업으로부터 몰래 받은 액수만 3백억이다. 대통령은 문제의 성금을 전달한 고아원·양로원의 명단을 금명간 밝히리라고 본다. 또한 대통령 스스로 이 돈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만큼 다른 재벌기업에서 그간 거두어들인 돈도 일간 공개하리라 믿는다. 다른 재벌들의 자선행위도 널리 알리는 것이 공평하므로 그들의 명단과 헌금액도 즉각 공개함이 마땅하다. 참으로 나라의 어른이라고 행세하기에는 수치스런 일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힘든 것'이라고 푸념을 한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집단이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그 개념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뭐라고 둘러대든지 간에, 덜되먹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마치 대통령의 인척은 멀쩡하게 놔둔 채 만만한 후보만 선거법위반으로 쇠고랑을 채우는 것이 정의가 아니듯이…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대목에서부터 냉소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집권층이 노리는 것은 썩고 무능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오도하고 정치권전반에 희석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소위 '안정희구심리'카드의 효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안정은 여당 선거공약의 단골메뉴이다. '안정속의 개혁'을 내건 이번 14대 총선도 그런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지건대 이 구호를 여당이 들고 나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군부집권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십년동안 오로지 권력연장만을 위해 불안한 정치상황을 연출하고, 선거때만 되면 다시 안정만이 살길이라며 유권자에게 한표를 구걸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니다. 결국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국정을 실컷 주물러대고도 항상 안정을 내걸어야할 만큼 국정수행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노골적인 심산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현정권은 안정을 지킬 능력도, 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5·16군사쿠테타 이후만 보더라도 국민은 꼭두새벽부터 밤까지 뻐빠지게 일하고, 권력자의 주문대로 다 들어주고 참아왔다. 10월유신이라는 이름하에 '1백억불 수출을 하면 1천불소득을 올리고 통일이 되며 모두 행복해진다'는 사기극을 보았고, 5공정권하에서는 '올림픽만 치뤄내면 선진국과 어깨가 나란해진다'는 미사여구에 폭압을 견뎌왔다. 그리고 6공정권이 들어선지 벌써 4년, 자칭 6·29와 구국의 3당통합을 이룬 이시점에서 그들이 내세웠던 개혁의지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통치력의 수준은 저질이요, 외세종속도 여전하며, 통일도 정권차원의 논의를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민주화의 길은 아직 요원하건만, 경제는 내리막을 치닫고 있다. 어느 한분야도 안정된 곳이 없다.

'안정'이라는 약효를 과신한 나머지 야당에서 전향한 여당의 최고위원은 얼마전 공식석상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침을 뱉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저들이 말하는 '안정'이란 그네들의 영화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안정일 뿐, 서민의 생활이나 살림살이의 안정과는 전혀 무관함은 정권교체 한번 없이 수십년간 같은 집단의 지배하에서 고달프고 고통스레 이어진 우리의 삶이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말이 난김에 충고하자면 민자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선거구호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적을 평가하건대 '참회'나 '개가천선' 정도의 구호면 무난할 것 같다. 아니면 솔직하게 '미련'정도는 되어야 유권자들이 다소나마 관심을 가지지 않을런지…

우리는 지금까지 안정이라는 환각에 사로잡혀 최악의 선택을 해 왔다. 그러니 유권자들도 최면상태에서 깨어나, 나라의 참된 안정을 이루려면 어떤 결정을 해야하는지 냉정히 생각해 볼 시점에 서 있다. 도대체 국가조직을 송두리째 정권연장의 도구로 삼는 망국적 버르장머리는 언제나 고쳐질 것인가? 온갖 불법수단과 관권을 총동원해도 참패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노후한 권력을 쉬게하고 나라의 안정을 찾는 길이다.

정권의 선택은 유권자의권리지만,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2. 권력에 길들어진 언론

앞에서 본 집권당의 국정운용에서의 타락상을 얼버무리고 그 책임의 절반을 비관세력에게 떠넘기는 여당의 생리는 '우리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3당통합 때문이 아니라 민주화정국을 선동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야당사람들 때문'이라는 유신앞잡이 출신 여당최고위원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잘되면 모두 나의 공이요, 잘못되면 정치권 전체를 걸고 넘어지는 이른바 물귀신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등공신은 뭐니뭐니해도 사세확장이나 눈앞의 이익추구에 혈안이 된 일부언론사와 기자정신을 팔아넘기는 사이비기자집단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력을 다하여 엉뚱한 곳으로 독자·시청자의 시선을 끌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전가의 보도인 양비론을 전개함으로써 정권보위에 파수병노릇을 해왔다. 이른바 강경대군의 폭행치사를 계기로 촉발된 공안정국의 파탄위기를 밀가루를 뒤집어쓴 총리사진으로 도배함으로써 넘겼고, 자치단체장 선거의 불법연기, 안기부·경찰·군·교도관의 폭력배비호, 국과수 허위감정사건 등 정권을 열번도 더 내어놓아야 했을 엄청난 사건들을 다른 기사로 덧씌워 바람막이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권력의 비리나 여당의 실정이 드러나기만 하면 이들은 다짜고짜로 정치권 전체를 도매금으로 싸잡아 매도한다. 알맹이 없는 고위공직자의 회견은 낮시간에도 모든 TV로 생중계한 다음, 저녁뉴스시간의 반 이상을 할애하고 그도 모자라 특집으로 꾸미는 등의 철딱서니 없는 편성에 관한 시비는 접어두기로 하자. 왜 TV 등 매체에서 인기가 요순위는 매주 빠짐없이 호화무대를 꾸며 방영하면서, 정작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의 기회는 한번도 마련하지 않는가? 온갖 저질 쇼니 급하지 않은 운동경기는 막대한 위성중계료까지 물어가며 무제한 방영하면서, 국민이 주목하는 정치인의 거르지 않은 의견은 단1분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가?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제대로 된 정치토론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이권만 밝히고 세비나 축내는 거수기일 뿐. 국민들 앞에서 당당한 토론조차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정수를 지금의 1/10로 줄여라. 그렇지 않다면 저급한 프로를 밀치거나 낮시간을 활용하여 이들이 매일 안방으로 찾아와 유권자에게 문안을 올리게 하라.

언론이 사회의 공기(公器)인 이상, 사회적 우선순위가 무시되거나 공정성을 잃은 프로나 보도는 당연히 전파의 낭비요 종이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환경보호니 물자절약이니 입으로는 떠들면서 쓰레기 재처리하는 시설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오염된 환경을 방치하면서, 수천억을 들여 고철과 파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잘못된 메카니즘과 동일하다. 그 원인은 먼데 있지 않다.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이다.

앞서 본 사이비언론은 정권의 이러한 취약점을 적절히 보완해 주면서 의리있는 공생관계를 도모한다. 언론재벌은 권력자의 요구에 맹종하여 간부진을 닥달하고, 일부언론귀족으로 행세하는 간부는 입속의 혀처럼 보도자료를 재단한다. 이들은 그 충성도에 따라정계출신이라는 프리미엄도 누리고 있다. 곡필로 악명 높던 기자들이 금배지를 달고 다니는 예가 적지 않다. 그래서 權·言유착은 깊어지고, 국민이 오도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들은 언론고유의 사명을 전혀 잘못 파악하고 있다. 읽을 거리가 없는 언론사의 사세 확장 이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러나, 이들은 또한 국민의 언론관을 지나치게 얄잡아보고 있다. 독자없는 신문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타락한 신문을 독자가 버린 예는 있어도, 정론을 펴는 언론사가 망한 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었다. 거액의 촌지를 주머니에 넣고서는 결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정권에 길들여진 언론은 이미 언론이 아니다. 최근 무역협회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우려내 창간특집기사를 쓴답시고 해외취재를 간 사건이 또 터졌다. 그 신문사는 불과 얼마전에 다시는 뇌물받지 않겠다고 국민앞에 철석같이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해당 신문사도 검찰도 꿀먹은 벙어리다. 끝까지 그 처리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문제의 기자나 언론사가 의법처리될 턱이 없는 것은 대통령인척의 선거법위반사건이 무슨 핑계를 불여서든 유야무야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 그릇된 법 집행

선거풍토를 흐리는 범죄는 진정한 민주화를 국가적 숙제로 안고 있는 처지에 비추어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아예 여당의 선거운동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이고, 검찰은 집권당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다. 엄정중립을 법으로 보장받는 기관이 이 모양이니 말단행정기관이야 일러 무삼하리요. 선거법만 하더라도 힘센 자에게는 거미줄이나 다름 없다. 문제는 형평을 잃은 법집행이 일상화 됨으로써, 특히 젊은이들의 법에 대한 경시·냉소풍조가 조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그 정도는 심하여, 상승적으로 정치불신을 부추기게 된다.

여권의 깊은 정치는 대통령이 안기부장과 그간 뒷조사한 자료를 놓고 무릎을 맞대고 전단하고 있다. 안기부의 심사를 거쳐 공천을 받고, 그 정보원들의 갖은 불법한 협박·압력으로 경쟁후보를 외국으로 내쫓거나 제거한 다음, 그들의 공작 덕분에 당선되는 여당의 후보들이 당선후에 할 일은 무엇일까? 이들은 이 탈법적 공작정치기관과 그정보요원들을 상전으로 받들어 모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말하자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월권을 일삼는 정보기관에 발목을 잡힌 꼴이 되고 만다. 정보정치란 별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당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당선된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섬기고 권력을 내맡겨야 할 일을 생각하면 실로 끔찍하다. 그런데 안기부법 제8조는 이렇게 못박고 있다. "안기부장 차장 및 기획조정 실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이러고서도 공명선거를 입에 담을 염치가 있는가? 안기부가 엄청난 국민의 혈세로 허구헌날 한다는 소위 '기획'이라는 것이 대관절 무엇인가? 그들은 아마 이렇게 강변할 것이다.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나 우리 특권층은 네놈들보다 더 평등하다."

앞에서 열거한 몇가지 현상은 젊은 층의 선거무관심을 해명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준다. 그밖에도 공동체에 대한 참여정신이나 연대의식을 강조하기 보다는 소아적 경쟁심을 주장하는 삭막한 교육여건 또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환경의 오염을 추방하려는 가슴이 뜨거운 선생님들이 대량학살당하는 척박한 교육풍토에서, 정의감이 강하고 매사에 당당한 젊은이만 배출되기를 바라는게 지나친 욕심인지도 모른다. 어떻든 극에 달한 가치혼동상을 극복하고 나아가 집권계층이 꾸며내는 조직적 부정선거풍토를 혁신하려면 그 토양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반세기 동안이나 기다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니 청년유권자들이 실망하고 염증을 느끼며 끝내는 좌절하여 고개를 돌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더우기 그들의 순수성에 비추어 환멸을 느끼는 정도는 기성세대보다 더 심하리라 추측되며 기성세대는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곧 정치 자체에 대한 포기와 정치허무주의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젊은이는 좀더 냉정해져야 한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목욕통의 아기까지 내다버릴 수는 없다. 기득권옹호세력에 의해 조성된 정치허무주의의 껍질을 이제는 깨야 한다. 정치는 필요악이다. 오염된 공기가 싫다고 진공상태에서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심하게 오염된 공기는 환기를 시켜 바꾸면 된다. 정치라는 상품의 속성은 통조림과 같은 완제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다듬고 맛을 내야 하는 과업이다. 스포츠는 페어플레이가 생명이다. 우리는 선수들의 정정당당하고 멋진 경기에 환호하지만, 선수들의 비신사적 행동이나 심판의 편파적 판정에는 항의하게 마련이다. 하물며 나라의 장래가 걸린 정치적 게임에서 한편에 유독 부정·자격미달선수가 많고, 이를 주관하는 중립적 국가기관이 편파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데도 침묵한다면 어찌 그를 젊은이라고 하겠는가. 침묵은 동의를 의미한다.

덜되먹은 민주주의나 천민자본주의로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능력이 모자라 제대로 못하는 민주주의와, 의사조차 없어 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젊은이는 없다. 내일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이야말로 비관적 선별력을 발휘할 때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역사의 방관자로 기록되어서는 안된다. 기성세대가 벌이는 정치판을 무차별적으로 외면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장래에 대한 포기 바로 그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추악한 어른과 비굴한 젊은이만 가득한 나라, 그 장래가 두렵다.

더욱이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는 새로운 세계질서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은이들이 '귀족적 관조(觀照)'를 하기에는 나라사정이 너무나 절박하다. 다시 묻노니 공권력의 인권유린이나 정보·공작정치, 변형된 폭력이 계속 난무하기를 바라는가? 힘센 자·가진 자와 힘없는 자·못가진 자를 위한 두가지 종류의 정의(正義)가 지배하기를 원하는가? 특정지연이나 학연이 없으면 장래도 기약할 수 없는 세상을 기다리는가? 법에도 없는 제재로 젊고 창의적인 연극·영화인이나 가수를 전과자로 만들어야겠는가?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면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법이니 애국이니 하는 따위의 골치아픈 논리를 몰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한줌도 안되는 기득권력 유지세력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기꺼이 헌납할 용의가 있는가? 그렇다면 기권하라. 그리고 더이상 민주주의나 정치를 이야기하지 말라. 아무리 성실히 노력해도 사람답게 살 수 없다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선택이니까.

젊은이들이여, 투표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소신을 밝히라 … 권력자의 추잡한 통치행태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그리고 시대착오적 불법관권선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 투표용지위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명백히 하는 것은 수만발의 최루탄을 잠재우는 일에 값한다. 때묻지 않은 손으로 표를 찍는 것은, 바로 시대적 모순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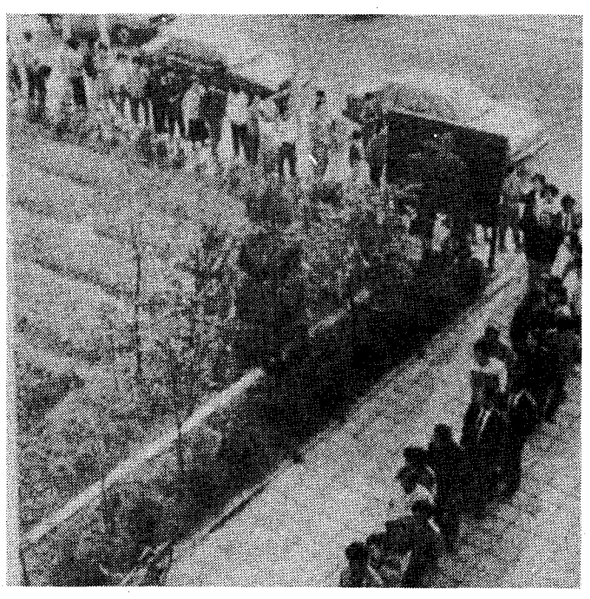
김 성 태
〈법대교수·법학〉

무크기획(1) - 정치무관심을 진단한다

왜곡된 권력 바로잡을 참정권

집권층·관제언론의 반민주적 행태가 젊은층 무관심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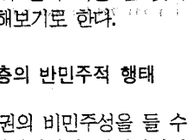
냉철한 분별력 발휘 통해 정치 허무의식 극복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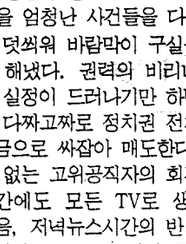
◇ 20~30대 유권자의 투표참여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 된다. (사진은 지난 13대 총선당시 투표를 위해 줄서있는 모습)

사직동,
한국사회과학도서관에 있습니다.

최신의 풍부한 사회과학 학술정보가 있는 곳 — 사직동, 한국사회과학도서관에는 최신간 단행본 52,000여권, 국내외 학술지 1,350여종, 마이크로폼 자료 55,000여점, 국내외 학위논문 및 각종 연구논문 등이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부르킹스연구소나 랜드연구소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 기관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제기구 발행의 통계자료, 미국외교문서 등 최신의 풍부한 외국정보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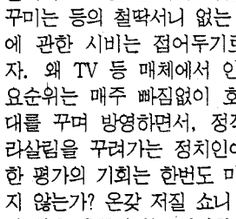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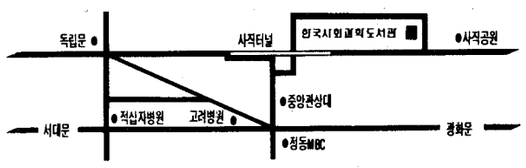
빠르고 편리하게 새로운 정보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국 사회과학도서관은 정보서비스 회원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착도서 및 학위논문 목록, 정기간행물 목차를 매월 발행하며, 서신 또는 전화신청에 의한 자료 복사 및 우송도 해드리므로 도서관을 직접 찾지 않고도 원하시는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학술정보 의 폭넓은 수집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사업학, 여성학, 지역 연구 및 그 인접분야의 사회과학 자료를 고루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 은 대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강사이상 또는 박사과정에 있는 분을 위해 개인연구실 12개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과학도서관
THE KOREA SOCIAL SCIENCE LIBRARY
종로구 사직동 304-28 TEL : 738-5015, 739-9258 FAX : 735-2693

第7回 全國 大學生論文 懸賞公募

신한은행은 1982년 7 월 7 일 순수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일반시중은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은행으로서 젊은이의 꿈과 야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금융시대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다짐하는 저희 신한은행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에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 7 회 전국 대학생 논문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진리탐구의욕에 불타는 전국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신한은행 개요
- 설 립 일 : 1982. 7. 7.
- 은 행 장 : 라 응 찬
- 자 본 금 : 5,160억원
- 총 수 신 : 5조 1,969억원 (1991. 10월말 현재)
- 영업점망 : 국내 109개소
  해외 7개소 (1991. 12월말 예상)

응모요강

1. 자 격
- 응모마감일 (1992. 5. 30) 현재 전국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2. 응모논제 (아래 논제중 택일)
1) 世界經濟의 Bloc化 : 韓國의 對應戰略은?
2) 中小企業 國際競爭力 : 그 強化方案은?
3) 急変하는 金融環境속의 銀行 : 앞으로의 進路는?
4) 教育制度, 어떻게 改革할 것인가?
— 先進經濟社會를 指向하여 —
5) 技能人力 不足難 : 教育訓練 制度의 改善方向은?

3. 응모마감일
- 1992. 5. 30 (토)
  (우송시 당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4. 당선작발표
- 1992. 6. 30 (화)
- 당선자 개별통지와 한국경제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고

5. 상 금
- 최우수작 : 1편이내 300만원
- 우 수 작 : 2편이내 각 150만원
- 가 작 : 3편이내 각 80만원
- 입 선 : 5편이내 각 40만원

6. 응모요령
-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70~80매 내외 (WORD PROCESSOR로 작성, 제출시 20~30매 내외)
  7~8매 정도의 요약분 첨부요 (WORD PROCESSOR로 작성, 제출시 2~3매 내외)
- 제 출 처 : 당행 본점 종합기획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및 지방소재 점포

7. 특 전
- 최우수작 및 우수작 입상자는 당행 입행지원시 필기시험 면제 특전 부여. (단, 당행 제반 채용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함)

8. 기 타
- 응모작 제출시 한문 성함 및 연락처를 명기하고 본인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할 것.
-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치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행소유임.
- 학교명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치 말것.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 본점 종합기획부로 문의할 것. (전화번호 : 756-0505 교환 3040, 3041)

새싹의 꿈 키우는 보람
신한은행